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尹사단' 대거 배치

반부패 1·2·3부장에 엄희준·김영철·강백신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장에 서현욱 박은정 좌천...'성남FC'는 이창수가 지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한 수사무마 논란에 휩싸인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좌천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한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게 됐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권력사건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北 피살공무원의 월북발표 논란'을 수사하는 실무진들도 새롭게 임명됐다. 기업과 공직자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부서에는 '특수동' 검사들이 나란히 배치됐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71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각 검찰청의 주요 수사팀 구성이 모두 새롭게 바뀌었다.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는 각각 차장검사사로 전무관 안산지청 차장검사와 형사6부장검사사로 서현욱 부산서부

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임명됐다. 해당 부서에는 '청와대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배당돼 있다.

전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서 부장검사는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으로 근무했으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준비단에 소속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장으로는 이창수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징계위기에 처했을 당시 대검 대변인으로 보좌했다. 옛 청와대에 파견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법무부 검찰과 등 기획부서 근무 경력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도 '인보사 의혹'

을 수사하기도 했다.

성남FC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은정 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로 전보된다.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혔지만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는 성상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성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근무한 바 있다.

같은 청에서 '北 피살공무원의 월북발표 논란'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장으로서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윤인분원 교수가,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조사 중인 공공수사2부장으로서는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뉴스

홍영표 당대표 불출마...이재명 불출마 압박↑ "새로운 비전 만들어 낼 통합의 리더십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한명이자 친문계(친문재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 28일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문계 전철철 의원에 이어 홍 의원마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의원의 전대 불출마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

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너져 내린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당의 기본 원칙인 책임정치,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전당대회는 단결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67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정당이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정책당으로 반드시 거듭날 것이다. 민주당이 다시 사는 길에 저를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北, 장마철 댐 방류시 사전 통지해 달라"

통일부 "우선 공개적 요구"...북측 통신 미응신

28일 통일부가 북한 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대북 입장을 발표했다. 호우로 인한 기술적 문제로 추정되는 남북 소통 중단 상황과 사안 시급성을 고려해 공개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이날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 지역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경 지역 주민 생명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로, 남북 합의에 따라 북측 수역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남북 간 통신 연결이 불안정한 상황과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우선 공개적으로 북측에 요구한다"며 "향후 통신선이 복구되는 대로 정식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를 경로로 한 남북 통신선은 이날 불통했다. 전날 오후 5시 마감통화까지는 정상 운영됐으나, 이날 수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에 북측이 통신선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 불통 원인으로 북한 내 폭우로 인한 기술 장

애를 추정하고 있다. 군 통신선의 경우에는 개시통화는 이뤄졌으나 이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아침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정기통화를 위해 오전 9시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응신이 없어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연락사무소 통신선과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판문점 계기실 통신선 또한 응신이 없었다"며 "군 통신은 아침에 정상이었는 데 이후 응신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측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발생한 기술 장애로 추정하면서 지속 확인,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측 지역 선로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대북 입장 표명 배경으로 "지난주 토요일부터 북측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댐 방류 가능성이"를 언급했다.

이상민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직급 높이면 위험해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공약과 관련해 직급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들과 첫 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로 윤 대통령의 공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의 장관 격상에 대해서도 그게 공약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다"며 "하러면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시대에도 힘센 기관은 직급을 많이 안 올렸다. 직급까지 높이면 위험해지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인사적체 해소하려면,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겠지만 만약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하면 다른 청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전체적인 직급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만만한 문제는 아니다"며 "경찰이 14만 인력이다 보니 인사적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행안부가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이 28일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

민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단독 원구성 수순

의원 170명 전원 명의 "언제든 본회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 양보에도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의장단 선출 등 단독 원구성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회 소집요구서에는 당론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제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언제든 본회의는 열릴 수 있다"며 "그 전까지 우리는 국민의 힘, 정부여당과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전 부대표도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금리에 고통을, 고유가까지 4대고(高)가 산적해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길 바라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폐상하는 것처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 국회의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출국을 앞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선 "필리핀에 가서 특사 활동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의 역할을 해서 4중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때다. 국회 정상화를 다시 한 번 국민의 힘에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

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함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단독 개최도 시사했다.

앞서 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시한이 경과돼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출국 전 오는 29일을 시한으로 청문결과보고서 제출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정부는 언제든 세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 시 정국 파행을 강력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오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틀만 더 기다리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앞에서 장관들의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명 강행이라는 있을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철저하게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오미화 의원 전남도의회 의장 선거 출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전남도의회에서 진보당 소속 의원이 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진보당 오미화(영광) 전남도 의원은 2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민주주의와 진보하는 호남 정치를 위해 도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출마에는 정의당 전남도당이 지원하기로 했다.

오 의원은 절대다수인 민주당이 자체 경선을 통해 의장단 후보를 선출할 때 대해 비판했다.

오 의원은 "호남은 특별하게 민주당이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당내 경선이 사실상 확정을 말한다"며 "이렇게 되면 의회 선출 절차는 의식행위에 불과하게 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통로는 원천적으로 막혀, 도의회는 민주당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도의회가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민의 뜻대로 일하도록 하겠다"며 "전남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협치의 정치문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與, 은행별 예대마진 분기→월별 공시 제도 개선 추진

대출가산금리 합리성 제고 방안도 금감원·금융위에 요청

국민의힘은 28일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개하도록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대출가산금리 산정시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민생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는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

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공시할 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에 요청했다. 대출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도록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 판매를 연장하는 방안과 신잔액 코픽스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고,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워크아웃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요청했다.

세입환원방식 공급 규모도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다음해에는 상향 추진하도록 금융위에 요구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은행권과 금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예대마진 관련 부분은 마진에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다른 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다. 가끔씩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가산금리는 어떻게 조정됐다고만 오지 제 가산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류 위원장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금융위, 금감원에서 그 상황을 특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TF 첫 회의... "정치공세 적극 대응"

민주 '尹정부, 文 흠집내려 '월북조직'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상 피격 공무원 '월북' 발표에 대한 여론의 의혹 제기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첫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국방부·전남·간사인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김민기, 황희, 윤건영, 윤재갑, 이용선 의원에 부속찬 전 국방부대변인으로 구성됐다.

김병주 TF단장은 "국민의힘이 TF를 만들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어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돼서 당에서 TF를 만들게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월북 조작 프레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TF를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월북 주장' 발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뒤집힌 데 대해 "명백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조이기 가 무분별하게 시작된 것"이라며 "취임한 지 한 달을 갓 넘긴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민생보다 오로지 정쟁을 목적으로 한 정치보복부터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

호매민평

이태헌

회귀 옥상옥

원래대로가는거야 치안본부물라?~

경찰국

인사청문회

死表

기원

개무서

태헌